

행안부 “청다오 항로 손실보전 협정 투자심사 대상”

민주당 당원 모임·도 질의에 “중투 받아야” 위법 답변
일부 고문변호사도 같은 해석 “예외 규정 적용 못해”
도 “법령 해석 주무부처인 법제처 최종 판단 받을 것”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와 제주~청다오 항로 운항 선사가 맺은 손실 보전금 지급 협정에 대해 미리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증 받아야 하는 투자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법제처에 투자 심사 패스 논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달고문변호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행안부마저도 위법이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며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이런 내용의 행안부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는 ‘제주도가 제주~청다오 항로 협정 체결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행안부장

관에게 의뢰해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해당 협정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등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 부담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의 판단을 받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4년 도가 제주~청다오 항로 운항 선사와 맺은 협정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유형에 속한다. 가령 지자체가 특정시점에 모 업체와 계약을 맺어 나중에 예산을 지출하겠다는 의외에 동의안을 제출했다면, 이는 당시 시점 상

그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지만 계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추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외의 의무 부담 행위’에 해당한다.

도는 청다오 선사 측이 충분한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해 ‘빈 배’로 다니는 등 손실을 보면 3년간 최대 228억원을 보전하기로 협정을 맺은 상태다.

도는 그동안 청다오 선사 손실보전금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도가 근거로 든 조례는 ‘제주도 항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다. 조례에는 해상 운송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도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 지방재정법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 중 ‘조례에 규정된 것’은 투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런 도의 논리를 배척했다. 본보 취재 결과 도는 올해 초 행안부에 투자 심사 대상

인지 질의했으며, 이때도 행안부는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안부는 제주도가 방패로 삼은 항만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 청다오 항로 개설만을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고 포괄적 지원 규정이기 때문에 투자 심사 예외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이는 최근 도에 법률 자문을 한 A고문변호사 의견과 같은 것이다. A변호사는 해당 조례가 명확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 삼아 투자 심사를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도는 법제처에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는 법령을 해석하는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제처의 최종 판단을 받아 투자 심사 이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자체가 지방재정법을 어기면 정부로부터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알림

한라일보에서 당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보세요

모집분야 : 신입·경력기자 0명
자격조건 : 초대졸 이상(재학생 지원 불가, 대학교·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마지막 학기 있는 자는 지원 가능)
※ 홈페이지 우측 사원모집 배너(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첨부파일)
제출서류 : 한라일보 소정양식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심층면접
서류접수 : halla2530@hallailbo.co.kr(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접수마감 : 2026년 1월 23일(금)
문의 : 한라일보 총무부 ☎ 064) 750-2531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 도정 정기 인사... 고위직 이동 폭 커지나

국장급 명예퇴직·공로연수 7명
장기교육 폭도 인사 이동 요인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마지막 정기인사 결과가 15일 발표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국장급 공무원들의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장기교육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3급 이상 교체 폭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오상필 해양수산국장과 이상현 제주개발공사 협력관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또 퇴임을 앞둔 김영길 교통항공국장과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강석찬 국회사무처 협력관, 이창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협력관, 정맹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은 퇴직준비 교육(공로연수)을 받는다.

국장급 보직에서 7자리가 비면서 4급 서기관들의 직급 또는 직위 승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교육도 인사 이동 요인이다. 현재 제주도에 배정된 장기교육 인원은 3급 부이사관 3명, 4급 서기관 4명, 5급 사무관 3명이다.

국장급 가운데 장기 교육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공무원들은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김태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강동균 전국제전기획단장, 김원철 서귀포시 부시장 등 모두 4명이다.

그러나 이중 부단체장 인데다, 현 보직을 맡은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김원철 부시장과, 올해 9~10월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을 준비해야하는 강동균 단장은 장기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공로연수를 1년 앞둔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 김형은 농수축산식품국장, 강동원 도의회 사무처장, 양승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종석 세계유산본부본부장 등이 유관기관 파견 등의 방식을 빌려 2선으로 후퇴하면 국장급 이동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직급이 가장 높은 강동원 이사관(2급)이 유관기관으로 파견을 가면 2급 승진 자리를 조상범 제주도안전실장이 꿰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번 인사는 19일자로 단행된다. 이상민기자

소상공 지식재산 창출 지원도, 27억 투입 경쟁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IP) 지원에 총 27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도와 지식재산청이 공동 주관하고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기업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라 나뉜다.

지식재산 지원 사업 설명회는 오는 20일(제주시)과 21일(서귀포시)에 잇따라 개최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참고.

진천희기자 sunny@ihalla.com



말뚝가리-큰부리까마귀의 영역 다툼 13일 제주시 아라동 상공에서 말뚝가리와 큰부리까마귀가 영역 다툼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 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묵국



고사리육개장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성게전복미역국



제주갈치순살비빔장



전복순살비빔장



소라순살비빔장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